

‘채상병 특검법’ 또 좌절... 자동 폐기

찬성 194·반대 104·무효 1표로 부결
국힘, 반대 당론 채택에도 ‘4표’ 이탈
민주, 거부권 대응할 상설특검안 거론
조국혁신,尹수사외압특검 대표 발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25일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의 건은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이태표 단속을 위해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

했으나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예정된 일정으로 불참하며 본회의에 참석한 범야권 의원은 총 191명이었다. 개표 결과 국민의힘에서 최소 3표의 찬성표가 나왔고, 무효표까지 합산할 경우 4명의 이탈이 발생한 셈이다.

개표 결과가 발표되자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탄식과 아우성을 쏟아내며 본회의장을 벗어났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조국혁신당은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 채상병 특검법 부결 직후 해당 법안을 기초로 한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공직 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결여가 있는 게 아니라 이번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권한쟁의심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국민의 엄중한 심판 역시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해 여야가 각각 특검법 대안을 놓고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일부에선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김재민·김한별 기자

韓 ‘공정 진행’ vs 禹 ‘국민의 뜻’ 미묘한 신경전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민심·국민 눈높이’에는 공감대 형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만나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국회 운영에 있어 한 대표는 “공정한 진행”을 강조한 데 비해 우 의장은 “(여소야대) 22대를 구성한 국민의 뜻”에 방점을 찍어,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한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국회의장실을 찾아 우 의장에게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때 보여줬던 합리적인 정치력과 여야를 가리지 않았던 공정한 진행에 대해 상당히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의장으로서도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정당대회 결과를 두고 “첫째가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라는 것이고, 둘째가 미래를 향해 유능한 정치를 하라는 것, 셋째가 외연 확장까지 해달라는 취지”라며 “국민의힘에 대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정치 전반에 대한 목표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특히 “의장님으로서 (현재 국회가) 굉장히 어려운 정치 상황인데 이점에 대한 실태를 제가 받은 명령을 기준으로 잘 풀어주길 바란다”며 “저도 그 점을 나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의장님과 상의드리고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 의장은 한 대표에게 “국회는 국민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예방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들의 민심을 그대로 투영해서 구성이 된다”며 “국회의장이 되면서 국민의 민심을 잘 받들고 22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뜻을 잘 관철해 나갈 수 있도록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얘기했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히 한 대표가 전대 수락 연설에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데 대해 “주의 깊게 들었다. 꼭 공감하는 말”이라며 “큰 기대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공개로 이어진 면담에서 한 대표는 우 의장에게 “합의 정신을 잘 지키는 협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취치에는 (우 의장도) 공감했다”고 면담 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재민·김한별 기자

방통위 초유의 ‘0인 체제’ 위기... 민주, 이상인 탄핵안 제출

72시간 표결에 26일 본회의 통과 가능
李, 공백 최소화에 ‘자진 사퇴’ 결심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통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자 이 직무대행이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려져 방통위가 일시적으로 ‘0인 체제’가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의 직전 방통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안산)을 의원을 비롯,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으며,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면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고 방통위는 0인 체제가 된다. 또 청문회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1인 체제가 되면서 의결을 할 수 없게 된다.

5인 체제 방통위는 한동안 2인 체제로 운영되었고, 특히 최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와 KBS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 야당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야당이 이 직무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도 이러한 절차를 저지하겠다는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현 과방위 간사, 한민수 과방위원이 국회 의안과에 방통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 사퇴를 결심했으며, 26일 오전까지 사퇴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면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 없이 사무처장이 사무처만 총괄하며 이진숙 위원장 후보자의 공식 임명과 후임 상임위원 임명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아니라 상

임위원 지위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할 수 있고, 후임으로는 조성은 사무처장 등이 거론된다.

이어 이진숙 후보자가 위원장에 임명되면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로 환원돼 방문진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2인에서 1인, 0인 체제가 됐다가 1인, 2인 체제로 다시 변화하게 되는 것이나 야당의 탄핵안 제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재민 기자

이재명 대북송금사건 관련 ‘검찰 논리’ 깨졌다

통일부 문서에 ‘키맨 리호남’ 언급 無
김성태 필리핀서 송금 ‘檢 주장’ 무색
野 “金 허위진술 근거” 李 무혐의 주장

이른바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통일부의 공식 문건이 25일 공개되며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이재명 대북송금사건’의 키맨인 리호남(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이 지난 2019년 아시아태평양평화국제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통일부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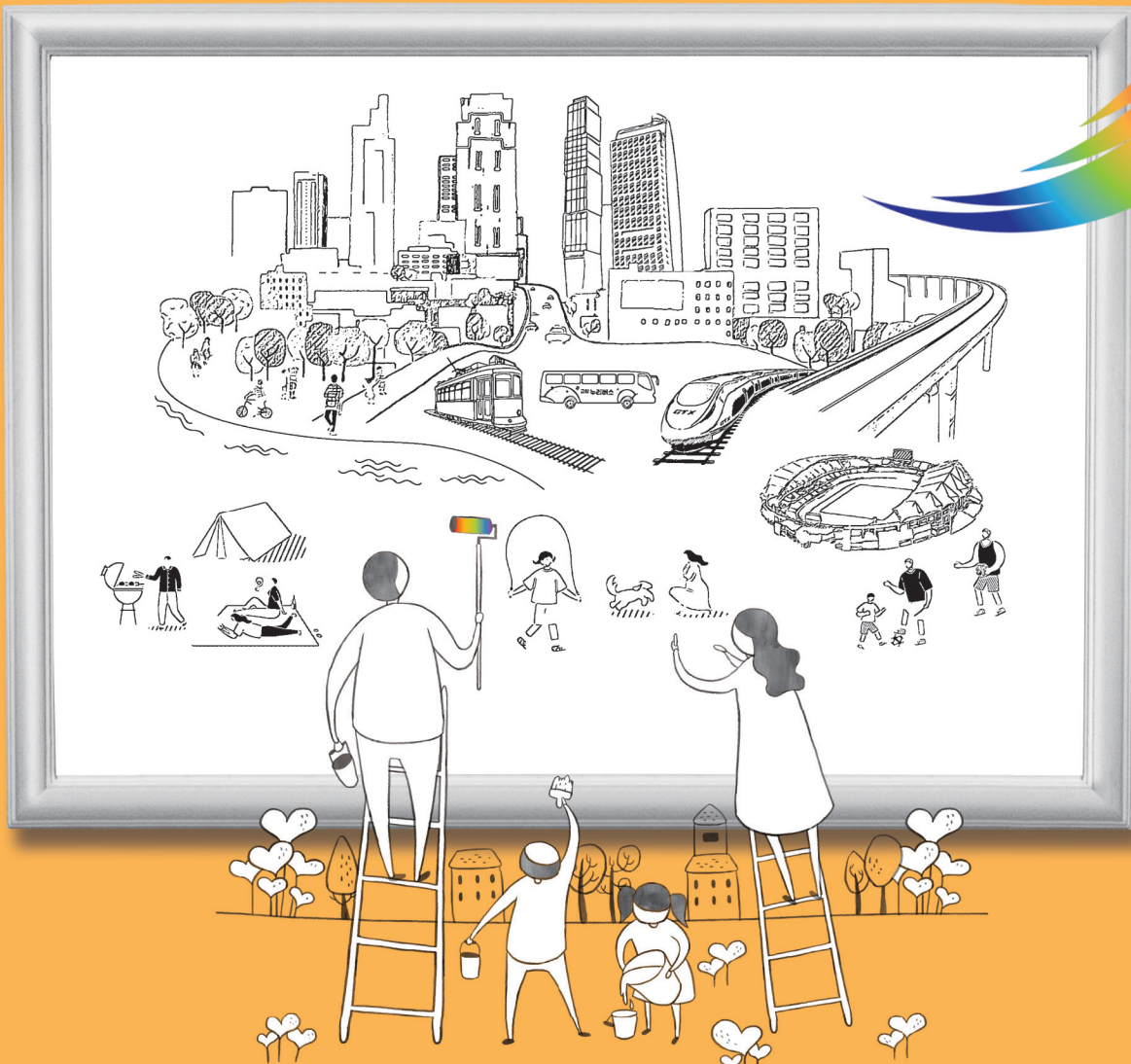
해당 문서는 당시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참석한 통일부 직원(당시 사무관 2인)이 작성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사특별대책단 소속 이재강(의정부) 의원이 통일부에 공식 요청하며 공개됐다.

이 문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24~27일

필리핀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참석한 북측 대표단은 총 6명으로, 그 명단에 ‘리호남’은 없었으며 해당 문서 어디에도 ‘리호남’은 언급되지 않았다. 특히 당시 북한 대표단이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한 시간부터 북경을 거쳐 북한으로 귀환할 때까지의 인터뷰, 연회, 회의 및 주요 인사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어떤 내용을 접촉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어 그 외 북한 측 참석자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검찰은 당시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통일부 공식 문서와 대회 참석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리호남은 현장에 없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대북단은 “검찰은 이전 대표가 300만 불을 주고 그중 70만 불을 아태평화국제대회를 통해 리호남에게 줬다고 주장하지만, 70만 불을 준 증거가 없다면 김성태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한별 기자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고양특례시**에

‘색’을 입히는 기술

시민행복과 글로벌 미래도시 가치를
실현하는 참 좋은 공기업



고양도시관리공사

GOYANG URBAN CORPORATION